소멸위기 해법은 일자리·로컬리즘 강화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 새롭게 터를 잡고 도전의 기회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목포 로컬여행투어 ㈜괜찮아마을목포 홍동우 대표(가운데)와 직원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지방시대 희망 리포트 〈1〉 프롤로그

가파른 '인구 절벽'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는 젊은 인구 유출도 급증세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소멸위기에 맞서 광주·전남지역에 터를 잡고 도전의 기회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자산들의 고향 혹은 제2의 고향에 정착한 귀촌·귀농어인이 그들이다. 또 기업들은 본사를 이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등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빈집 리모델링, 농촌유학 프로그램, 촌캉스 사업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활발하다. 광남일보는 이들의 희망찬 도전을 소개하는 연중기획을 통해 지방소멸의 출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젊은층 외지로
수도권 쏠림 전남 20개 시·군 '소멸위험'

촌캉스 등 생활인구 늘리기·일자리 창출
지자체마다 생존 위한 활로 찾기 안간힘

합계 출산율 '0.72명'. 한국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1.3명 미만인 '초저출산국'을 지나 이미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에 진입했다. 지난 2023년 기록한 합계출산율 0.72명은 마카오(0.66명)을 제외하면 세계 최저로 추정된다.

전남의 현실은 더욱 처참하다.

저출생과 고령화 쓰나미에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소멸위험지역으로 추락했다. 한국고용노동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남은 소멸위험지수가 0.329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시와 광양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20~30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이 11곳(고흥·신안·보성·함평·구례·진도·곡성·장흥·해남·완도·강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대만 해도 250만명을 웃돌았던 전남의 전체 인구는 179만8000명으로 10년 새 5.1% 감소했고, 이 중 20~30세 여성인구는 23.4% 급감했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 동구·서구·남구·북구는 소멸주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인구는 2014년 147만 5000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매년 1만명 넘게 줄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140만 명 붕괴가 유력하다.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일극체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의 단면이다.

지방소멸을 막을 해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 로컬리즘(localism·지역성)의 강화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전남에서도 무너져가는 터전을 살리기 위한 자생적 노력이 희망 바이러스가 돼 번지고 있다. 자신의 고향 혹은 연고가 없는 제2의 고향에 정착해 소중한 꿈을 일구는 로컬크리에이터, 한달살이를 하다 시골의 매력에 푹 빠져 시골사람이 되기로 한 귀농어인 등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 청년들이 유입되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 청년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민과 상생협력하는 전남형 청년마을이 생겨나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잊혀져 가는 옥공예를 되살리는 해남 황산면 '농농길 청년마을', 100년 고택을 리모델링해 k-디저트체험, 플로킹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수 '쉬어가는 마을', 빈집을 활용해 마을호텔을 운영하는 영암 '청년인생 내컷'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도가 지난 2022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인구절벽 문제가 '발등의 불'인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유출 방지,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설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을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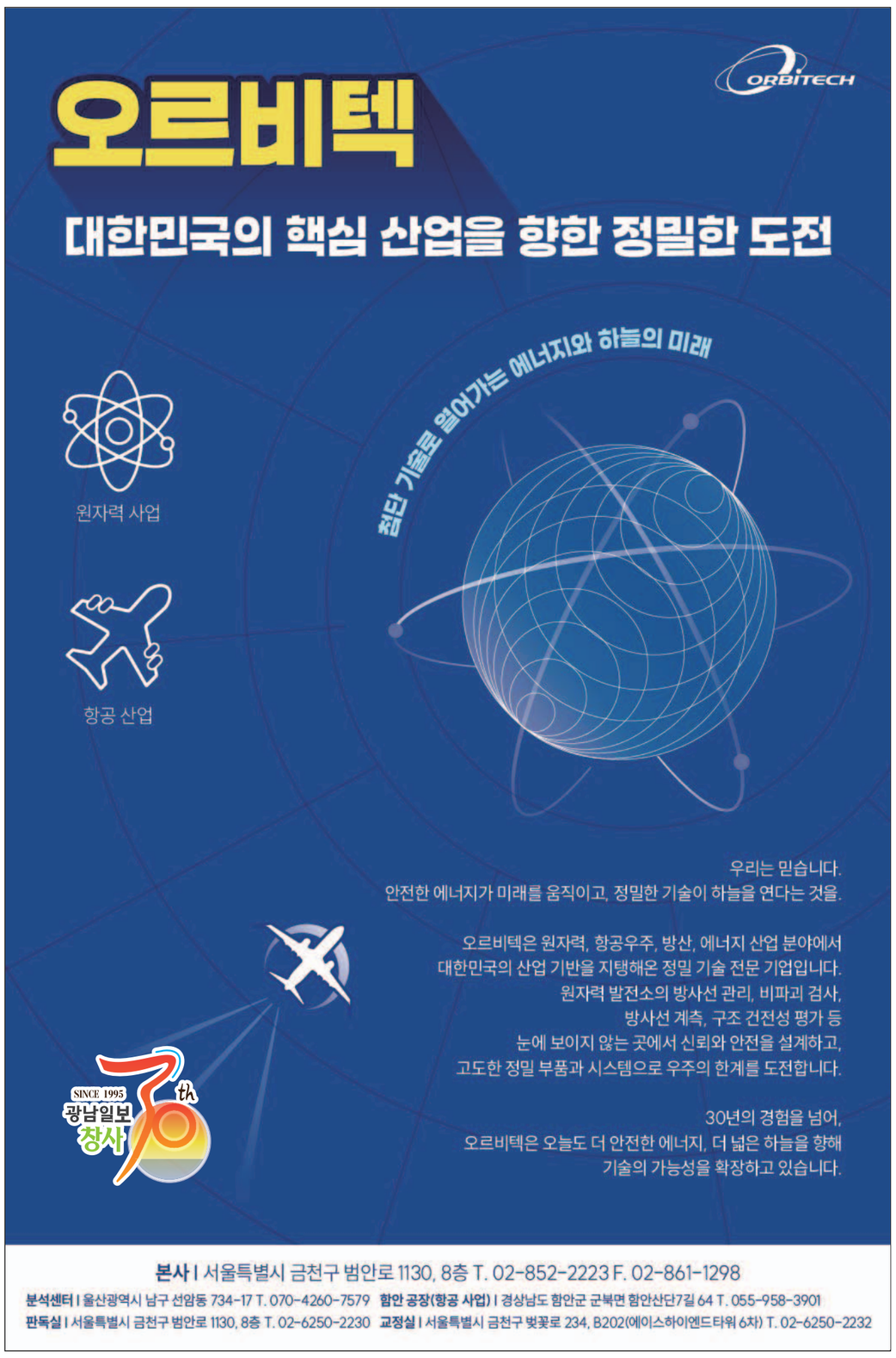
특히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시·군과 함께 만원 세컨하우스·고향(愛) 여행가자 운영, 블루워케이션 확대 등 지역정착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섰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은 "전남의 자연인구(저출생·고령화)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증가가 불가하고 사회인구는 학업과 취업으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해 사회인구의 핵심인 생산가능인구 유입 확대와 청년 유출 최소화라는 두 개의 축을 적절히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인구유출에 있어 청년층, 특히 여성청년층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유입 장려 방안 강구, 기술과 재정 역량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의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에 외부인구가 머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 및 추진 방안의 하나로 '2050 전남 인구대도약 종합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장성 청년농업인 이호엽 대표

경영실습 임대농장 청년농업인 김인겸

영광 청년농업인 박민호 망고야 대표